

핵심기술 해외이전시 사전승인 의무화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매각 또는 이전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 보안관련 컨설팅을 받거나 방화벽을 설치할 경우 소요비용의 60%까지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조정하고 처리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민간단체, 정부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기술유출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9월 1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현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IT분야를 중심으로 주요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사업 또는 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이전할 때는 의무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유출때 해당 산업은 물론 경제와 국가안보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또 불법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을 현행 기업체에서 연구소와 대학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술유출을 저지른 자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신용보증제 도입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문화산업진흥기금 융자 사업에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9월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 기금의 융자방식과는 달리 문화콘텐츠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로 융자대상자를 선정해 기술신용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아이디어와 창의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융자를 받지 못했던 문화산업계에 실질적인 자금지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분야는 애니메이션·전자책·게임·음반·캐릭터 등 문화상품의 기획제작과 콘텐츠 상품화 및 마케팅 지원의 문화상품 개발 융자사업이며, 추후 유통구조 및 시설현대화 융자사업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융자 지원한도는 동일 사업당 10억원 이내이며, 동일 기업당 30억원 이내로, 올해 100억원, 내년 500억원이 지원되며, 융자금리는 4.325%로 적용된다. 올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의 기술담보대출 지원규모는 약 100억원이며, 내년에는 5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융자신청 및 접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중소·벤처창업자금 금리 4.9%로 인하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5월에 5.5%로 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이를 4.9%로 추가 인하하기로 하고 10월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은 창업예비자 및 설립 3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대해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중고설비, 원부자재 구입비,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당초 300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증액된 바 있다. 아울러 현재까지 중소기업·벤처창업자금은 약 712개 업체에 1500억원이 지원됐다. 지원한도는 연간 10억원(운전자금 5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리 4.9%(변동금리),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이다.

중기청은 또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과거 관행에서 담보여력이 부족한 신규 창업자에 대한 원활한 대출을 위해 보증서 및 순수신용대출 비율을 36%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